

민감룡, 대면강의 불안하다는 경찰대 생에 "거부하면 방역현장 투입"

입력 2020-04-13 16:45 수정 2020.04.13 17:56

민 청장 경고메시지에 학생들 부글부글
총선 당일 투표하면 2주간 격리조치에도 비판 이어져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달 12일 충남 아산 경찰대학에서 열린 신입경찰 경위·경감 임용식에 참석해 민감룡 경찰청장과 함께 계급장을 수여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민감룡 경찰청장이 최근 경찰대의 대면강의 조치에 대해 학생들이 불만을 쏟아내자 "강의를 거부하는 학생은 방역현장에 투입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강의 대신 대면 강의를 강행한 데 대한 학생들의 불만이 커지자(본보 6일자 10면 참조) 10일 학생 간담회를 통해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 자리에서 학생들은 다수 의견으로 대면 수업 반대(76%)와 4·15 총선 이후 온라인강의 수강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대로부터 학생들의 불만사항을 보고 받은 민 청장은 11일 경찰대학을 통해 학생들에게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 민 청장은 "일선 경찰관들은 물론 군인들 갓 졸업한 간호장교도 방역에 투입되는 상황"이라며 "분위기 파악을 하지 못하고 온라인 교육을 받겠다는 등 정상적인 교육을 거부한다면 일손이 부족한 방역현장에 투입해 현장 실습을 시키겠다"며 엄포를 놔다. 그러면서 "경찰대학은 국민들에게 철저한 생활방역을 통해서 대면교육도 가능하다는 모습을 모범적으로 보여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로써 신종 코로나 사태 이후 대면 강의를 시작한 경찰대 갈등은 더욱 증폭되는 양상이다. 경찰대는 코로나 사태 초기 2주간 기숙사에서 온라인 수업을 진행한 뒤 지난달 30일부터 강의실에 학생들을 모아 놓고 대면 강의를 하고 있다. 대학 측은 온라인 수업 기간 동안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고 시설에 대한 방역 조치를 마친 만큼 대면수업에 무리가 없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감염 불안을 꾸준히 제기하고 있다. 경찰대 학생회는 최근 온라인 강의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문까지 냈다.

최근 경찰대 측이 총선 당일 투표 대신 사전투표를 독려하면서 갈등의 전선도 넓어지고 있다. 학교 측이 '총선 당일 투표를 하면 2주간 격리조치하고 성적에도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공지하자 학생들은 "참정권을 침해하는 조치"라며 크게 반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학교와 본청에서 관련 사안을 조율하고 전하는 과정에서 청장님 말씀으로 내용이 전달됐다"며 "투표에 관해선 참정권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전문가들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hankookilbo.com
